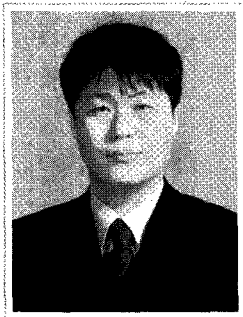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박 덕 렬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발 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2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다.

동 지원 사업은 1990년 시행 이후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발생해온 민원을 해결하고 전원 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과정상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력 산업 구조 개혁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급변 법령 개정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원 제도 개요

1. 목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 발전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는 한편, 신규 전원 입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근거법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에 제정되어 1990년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전전년도 전기 판매 수입금의 1.12% 이내의

한전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

2. 지원 사업 내용

지원 사업은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 면 동 또는 해당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전지역(특별 지원 사업)에 걸쳐 행해지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지원 실적

지원 사업의 재원은 수 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는 전기 판매 수입금의 1.12%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1990년 사업 시행 이후 총5,000억원 이상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소요되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1. 지원 사업 관리 주체의 변경

현재까지 지원 사업 계획의 수



〈표 1〉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사업 내용	시행 자
기본 지원 사업	주변 지역	건설·가동	도로 상하수도	지자체
			농수산 시설 등	
			장학금 등	사업자
특별 지원 사업	기초 지자체 전지역	건설 기본 계획 확정시부터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	지자체
전기 요금 보조	원전 주변 지역	건설·가동 기간	주택용 전력 산업용 전력	사업자
주민 복지 지원	주변 지역	건설 준비 기간부터 5년간	주민 용자	지자체
기업 유치 지원	"	건설·가동 기간	기업체 용자	"
홍보 사업	주변 지역	"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홍보	사업자
	대 국민	"	원자력 홍보	문화재단
기타 지원 사업	-	-	환경 감시 기구	지자체
			조사·연구 등	사업자

〈표 2〉 연도별 지원 실적

구 분	1990~1992	1993~1994	1995~1996	1997	1998	1999	2000	총 계
금 액	362	427	700	641	847	1,195	983	5,155
재 원	전기 판매액의 0.3% 이내	0.5% 이내	0.8% 이내	1.12% 이내				

〈표 3〉 발전원별 지원 내역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계획)
원 자 력	218.1	234.5	356.7	728.5	476	1,069
기타 수·화력	248.4	406.0	489.9	466.4	507	627
계	466.5	640.5	846.6	1,194.9	983	1,696

립, 기금의 운용 등 지원 사업의 실질적 집행 업무는 독점적 전력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종래 한전이 시행하던 공익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등 지원 사업 관련 업무가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한전 소속에서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그 위원장은 한전 사장에서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종전 한전이 관리하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폐지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기금에 통합되어 전력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게 된다.

2. 자을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원 시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유연탄 화력 발전소 등의 시설을 자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현행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특별 지원금에 건설비의 0.5% 해당 금액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산 지원금은 조기에 앞당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대규모 원자력 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9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건설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용이한 입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3. 지역 발전과의 연계 강화

그 동안 지원 사업이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종전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의 수립권자가 한전으로 되어 있어 지역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 발전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는 한편, 신규 전원 입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표 4〉 2001년도 지원 사업 계획

사 업 구 분	사 업 량(건)	지원 금액(백만원)	
기본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172	6,938
	공공 시설 사업	539	17,805
	육 영 사업	171	12,028
	소 계	882	36,771
전기 요금 보조 사업	4	2,853	
주민 복지 지원 사업	1	300	
기업 유치 지원 사업	12	3,240	
특별 지원 사업	42	114,715	
홍 보 사 업	57	10,371	
기 타 사 업	환경 감시 기구	4	950
	부대 사업	45	400
	소 계	49	1,350
총 계	1,047	169,600	

려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인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의 수립권자

를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을 종전 기본 지원금 10억원 이상 지역에서 특별 지원금 100억원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4.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금 산정시 종전에는 동일 면적에 건설되는 원전의 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설 용량 380만 kW의 원전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확보 부지 면적의 축소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확보하였다.

또한 특별 지원금의 산정시 건설비의 적용 기준을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의 평균에서 최근에 수립된 3개의 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상의 건설비의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

기대 효과

1. 자율 유치와 원전 다수 호기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전력 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 유치의 정착으로 전원 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종전의 일방향을 탈피하고 전력 산업과 지역



현행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제도는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과 이의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결과 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전력 산업의 환경은 지원 사업이 경쟁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원리가 도입되고 발전 경쟁이 본격화되는 향후의 전력 산업 환경에 적절한 지원 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회의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 지원 사업의 장기 계획을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매년도 지원 사업 계획에 당해 장기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원 사업과 지역 발전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지역 사회의 종합적 개발 계획을 고려한 지원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지원 제도의 개선으로 현재

진행중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동 시설을 자율 유치하는 경우 총 지원금은 2,900억원 이상이 되어 지역의 발전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원 사업의 재원에 있어서는 종전에 기타 기금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폐지되고 공공기금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 어

전원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남비(NIMBY) 현상을 극복하고 발전 사업과 지역 사회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와 지역 주민간에 적절한 비용과 편익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전국민의 부담(전기 요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비용과 편익의 분배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지원 제도는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과 이의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결과 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전력 산업의 환경은 지원 사업이 경쟁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원리가 도입되고 발전 경쟁이 본격화되는 향후의 전력 산업 환경에 적절한 지원 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과 전원 사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곧 착수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